

민주 "탈환" 2野 "사수"...선거제·정계개편 변수

1년 앞으로 다가온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쪼름거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잇달아 호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3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완패한데 대한 설욕을 다짐하고 있고,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일으킨 제3세력의

바람이 다시 불어 닦발을 사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까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야권발 정계개편 등의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만들어 낸 호남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개편안 극적 타결엔 지역구 조정 불가피 광주·전남지역 의석수 2석씩 줄어들 수도

'선거제 개편' 초미의 관심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는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이 꼽힌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일부 지역구가 조정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은 향후 전개될 선거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이에 따른 선거구 확정에 관심을 보이며 주판알을 빙기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연계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과 함께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발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로 통폐합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4당에서 추진중인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의 국회의원 의석 수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게 되면 광주는 8석에서 6석으로, 전남은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광주에서는 동남읍과 서구율이, 전남에서는 여수갑과 여수율이 각각 인구 하한에 미달한 상황이라서 의석 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에 미달한 광주 동남읍이 동남갑과 합쳐지거나 북구갑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 서구갑과 서구율도 합쳐져 서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남에서는 여수갑과 여수율을 합쳐 여수시로, 해남·완도·진도군을 해체해 인근 지역구로 분산 편입해 1석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문 대통령·트럼프 단독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래당·평화당 호남의원들 '전멸' 위기감 정치적 활로 모색... '제3지대론' 통합 움직임

호남발 정계개편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호남 의원들의 '제3지대론'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통합도 최대 변수로 꼽힌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미래당과 평화당의 호남 의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전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호남발 정계개편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에 대한 호남 민심의 실망감도 '제3지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호남에서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초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50%대로 내려 앉으면서 야권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평화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극단 세력으로 가는 데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상호 견제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제3지대를 만든다면 다시 한 번 바람이 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이 이들의 '제3지대 통합'을 반긴다는 미지수다. 3년 전 총선에서 제3당 역할을 해달라며 밀어줬던 '국민의당'이 결국엔 호남 민심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 민심은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들은 다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하면서 제3당 역할은 커녕 호남 정치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따라서 바른미래당·평화당 소속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할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 넘쳐나는 지원자...야당은 민심 변화 기대

與 치열한 경선 속 野 반격 주목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는 18석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3석, 바른미래당 4석, 민주평화당 9석, 무소속 2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남에서 단 1석을 얻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광주·전남 2곳을 싹쓸이하면서 모두 3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이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지지를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호남 석권'을 노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지지율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간다면 민주당의 사실상 완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지방 권력'을 장악한 점이 총선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각 지역구별로 넘쳐나고 있다. 일부 지역위원장들과 출마 예정자들 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호남 세력이 결집해 견제 세력을 만든다면 지난 총선에서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야당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지역 민심이 민주당 지지를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역의원 의정 보고회·각 당 조직개편 등 박차

지역 정치권 본격 총선 대비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 예산 확보 등을 알리는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당 지지율이 미미한 만큼 대외적인 정당 활동 보다는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와 조직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평화당이 최근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여는 등 각 정당은 지역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는 등 총선 준비를 위한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각당은 핵심 당원 연수 등을 진행하며 당원 결집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중앙당 관계자들이 직접 광주와 전남을 돌며 지역위원회별 조직 점검과 지역위원장들의 경쟁력 비교 등 내년 총선을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공천 및 경선 준비도 시작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권리당원으로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개월간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당내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선거 일정을 정하고 경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